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김희강 외, 2016년, 앨피)

김동현*

1. 한국 다문화주의의 역설적 국면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관련 논의는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시작된 후 2000년대 중반, 정확히 말하면 2005년 5월 외국인 문제가 ‘대통령 지시 과제’로 격상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5년 이전까지 한 해 최대 50~60편 정도에 그치던 ‘다문화’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 수가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2010년 들어서는 ‘다문화’ 관련 논문이 매년 1,000편 이상 발표되고 있고, 그 결과 2016년 12월 현재 국내학술지 누적 논문 수는 10,000편을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¹ 한국 학계에서 다문화주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매우 인기 있는 연구 주제였던 것이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급증, 경제 활동의 자본주의적 지구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초국가적 문화 교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비롯한 국적법 변화 등은 그와 같은 연구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전거를 형성했다.

1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다문화’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2016년 12월 7일 ‘다문화’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논문 수	10	13	14	16	29	36	46	58	53	65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논문 수	139	292	654	946	1,217	1,281	1,365	1,398	1,340	1,235

*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 정치학, dkim0007@hanmail.net

한국 학계의 상황과 달리, 1970년대 중반부터 문화적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자 이데올로기로서 다문화주의를 옹호했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를 선언함으로써 그 현실적 유효성을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한국 학계에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일찍이 다문화주의 이론을 다듬고 그 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들이 그에 대한 근본적·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지금 다루고 있는 책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이론적 국면에 개입할 것을 공언하면서 출판된 책이다. “과거 다문화주의 관련 논의가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갈등 해소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로서 전제하고 있었다면, 이제 논의는 “다문화주의의 표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10)는 기획위원의 언급에는 그와 같은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책은 총 12편의 논문을 “제1부 ‘다문화주의’라는 문제”, “제2부 한국의 ‘다문화’ 인식 비판”, “제3부 다문화사회의 문학, 번역, 교육”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실고 있다. 그 전체적인 구성을 간략히 살펴 보면, “제1부 다문화주의라는 문제”에서는 다문화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작업을 시도하고 있고 “제2부 한국의 ‘다문화’ 인식 비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양태들과 그 극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 다문화사회의 문학, 번역, 교육”에서는 문학, 번역학,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점검하고 있다.

2.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천 재고

“제1부 ‘다문화주의’라는 문제”에는 김희강의 「다문화주의의 역설, 이용승의 「다문화 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김현미의 「귀화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 윤석민의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선진유가의 다원주의」 등 총 네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김희강의 글이 다문화주의 이론에 내재하는 난점

을 쟁점화한 글이라면, 이용승과 김현미의 글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권리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윤석민의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선진유가의 다원주의」는 『논어』, 『맹자』, 『주역』 등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철학적 원리를 모색한 독특한 글이다. 여기서는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이라는 책 제목에 걸맞는 세 편의 글, 즉 김희강, 이용승, 김현미의 글을 중심으로 이 책의 논점을 살펴 보겠다.

우선 김희강은 「다문화주의의 역설」에서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이론가이자 옹호론자인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이론,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이론의 논리적 문제점을 비판한다. 특히 이 글은 소위 다문화주의의 ‘열풍’이 지나간 뒤 그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부상하게 된 시대, 즉 “후기 다문화주의 시대”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 평가를 재평가해”(23)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날 다문화주의 비판에 대한 킴리카의 비판적 대응과 계속된 다문화주의 옹호 입장을 충실히 소개한 후, 다시금 킴리카의 주장을 비판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김희강이 킴리카의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민자 문화를 외래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선별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유입을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주 수용국의 강한 국경 통제력을 요구한다는 점, 이주를 이주 수용국의 국익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점 등이다. 킴리카는 이주 수용국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 현상을 부인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다문화주의는 이주 수용국의 정책”(55)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뒤,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포용을 여는 새로운 흐름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의 전제가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57), 또한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이 다른 중요한 정의의 이슈를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57)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는다. 이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뿐만이 아닌 다문화주의 그 자체 또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요지다.

이용승의 「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와 김현미의 「귀화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는 상이한 각도에서 이주민의 권리 문제에 접근한 글이다. 우선 이용승은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의 모순을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대립으로 규정한 뒤, 시민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지위, 권리,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에 관해 서술한다. 우선, 법·제도적 지위의 측면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정체성의 근거로서 ‘법적 지위의 획득 여부’를 요청하지만 다문화적 권리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문화적 권리의 주체는 “문화 집단의 일원”이고자 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과 비시민, 국적자와 비국적자의 경계를 넘나든다.”(82) 다음으로, 권리의 측면에서 시민권은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지만 다문화적 권리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 차별적 권리’를 요구한다. 그리고 정체성·소속감의 측면에서 시민권은 ‘공동체(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요구하지만 다문화주의는 ‘국가 내부의 문화 집단’에 대한 충성과 귀속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이용승은 세일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와 토마스 하마르(Tomas Hammar)에 기대어 ‘정의로운 구성원권(membership)’과 ‘주민권(denizenship)’을 일종의 대안적 원리들로서 제안한다. 이때 ‘정의로운 구성원권’은 “‘단지’ 구성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어질 수 있는 권리와 부과될 수 있는 책임, 인정될 수 있는 정체성이 있”(92)다는 것을, ‘주민권’은 “체류 자격 내지는 법적 지위, 개인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단지 그/녀가 해당 지역(local)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와 지위, 정체성이 있”(93)다는 것을 각각 강조하는 개념들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이용승은 두 가지 권리의 현실화가 ‘품위 있는 사회’라는 이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귀화 이주민과 문화적 권리」에서 김현미는 파키스탄 출신 임란 씨와 티베트 출신 네팔인 민수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됨’과 ‘문화권’의 충돌 및 협상 과정을 다룬다. 우선 이 글은 귀화인 임란 씨의 배우자 입국 거부 사례를 토대로 ‘복수의 법치주의(plural legalism)’에 관한 물음을 던진다. 임란 씨는 혈족 간

혼인을 허용하는 본국에서 법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이 부합하는 배우자를 선택했지만, 한국에 귀화하는 순간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한국 법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가족 결합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귀화불허 조치를 당한 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 귀화 적격심사 시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요건, 즉 ‘품행방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정부는 벌금 2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품행 미단정’의 사유로 귀화를 불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주자의 정치 참여나 시위 참여 또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동질성의 신화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화 이민자들의 특별한 태도, 공격적 성향, 완고함, 자기 문화적 전통에 집착하는 것 등은 곧 부도덕함, 부적합성, 무능력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궁극적으로 “한국적 통치성을 통해 위계적 배열 속에서 열등한 시민으로”(137)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는 임란 씨와 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초국적 이주의 시대 유동적이며 확장적인 문화 해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한국의 경우 정치적 영역이란 여전히 혈연적 국민에게만 개방된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는 다문화적 시민권이란 유연하고 포섭적인 성격을 지닌 ‘협상’과 ‘의미 투쟁’의 영역이므로, 한국 사회는 자기만족적·자기보존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의 국적 안에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김희강, 이용승, 김현미 등의 논의는 기존 다문화주의 이론과 실천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주의 논의에서 주로 인용되는 김리카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업은 이후 다문화주의 관련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전거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용승과 김현미의 글은 한국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서, 현실성 있는 다문화주의 이론과 정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국의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비판

“제2부 한국의 ‘다문화’ 인식 비판”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중심으로 이주민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인식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분규의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와 이화숙의 「다문화 시대 소수자의 ‘명칭’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명명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그 교정책을 제안하는 글이고, 이진형·박종명의 「대중매체와 다문화적 ‘토크’의 상상」과 주재원의 「다문화 뉴스 제작 관행과 게이트키퍼의 문화정치학」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의 작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글이다.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명칭이 “가난하고 못 배운 저개발국 출신 여성 이주민들이 한국의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 가구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178)으로 범주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를 넘어선 사회통합의 전망을 모색한 글이다. 구분규는 다문화주의가 ‘주도 집단에 의한 선별적인 포섭과 배제의 종족 정치’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언론보도 자료와 정부의 이주민정책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다문화 가족’이란 특정 이주민의 선별적 지원, 이주민 집단의 문제화, 이주민의 인적자원화, 이민자의 타자화·주변화, 이주민의 인종적 범주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을 지적한다. 요컨대,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이민으로 발생한 종족적 다양성을 관리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인적자원 담론에 기반하여 국민이 될 이민자들을 지원하려는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범주”(225)였다.

흥미로운 것은 구분규가 ‘다문화’의 부정적 범주화뿐만 아닌 이 범주를 두고 벌어지는 협상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민들은 ‘다문화’라는 범주를 거부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수용하기도 하면서 “주류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소속을 협상”(218)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치체계를 매개로 혹은 ‘초국성’을 무기로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하위 주체화하는 방식에 저항하는 한편 스스로를 주체적 존재로서 재

규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구분규는 ‘다문화 가족’ 대신 ‘이주민 가족’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함을 주장하는데, “어떤 범주를 사용하든 그것이 이주민들을 특정 집단으로 구별하는 범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226)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화숙의 「다문화 시대 소수자의 ‘명칭’ 연구」는 ‘결혼이주’, ‘결혼이민’,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등을 연구 주제로 설정한 74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 집단’을 가리키는 65종의 명칭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비판적인 고찰을 수행한 글이다. 이 글은 다문화 시대 바람직한 명칭이란 ‘가치 중립적’이고 ‘사회적 편견이 배제’된 것이어야 함을 전제한 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혼이주민’을 그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제안한다. ‘결혼 이주민’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만을 제시하여 문화적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고, “이입의 유형을 ‘이주’라는 광의로 규정하고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적취득 혹은 법적인 지위와 무관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주민(Denizens)이자 구성원으로서의 집단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261)해준다는 게 그 이유다.

「대중매체와 다문화적 ‘토크’의 상상」은 TV 토크쇼가 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시청자(대중)의 소망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두 편의 토크쇼(〈미녀들의 수다〉와 〈비정상회담〉) 사이의 긴장 관계를 탐구한 글이다. 이 글에서 이진형·박종명은 한국 정부의 다문화주의란 이주민들을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자, 우수 외국 인재로 범주화해서 관리(통합/배제)하려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 이주의 젠더화, 불법화, 위계화라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재현하는 상상된 다문화적 공론장(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이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는 탈중심적 친밀감의 영역)에 이상적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소망이 투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가능한 다문화주의 정책(이주의 젠더화·불법화·위계화)의 비판적 상대화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다문화 뉴스 제작 관행과 게이트키퍼의 문화정치학」에서 주재원은 뉴스 소

재를 취사 선택하고 가공하는 재생산 시스템으로서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를 매개로, 공영방송이 국가적 우월성과 계층화된 인종 질서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이 글은 KBS 뉴스 담당 기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뉴스 제작환경과 기자들의 다인종/다문화 인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렇지만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기자들의 개별적 의견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게이트키퍼, 즉 “관례적으로 구축된 이주민 관련 보도의 틀”과 “인종적 편견과 자민족 중심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영방송 KBS의 시스템”(331)이다.

“제2부 한국의 ‘다문화’ 인식 비판”에 실린 네 편의 글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재)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네 편의 글이 공통되게 주장하는 바는 개별 주체의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구화 시대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바로 그 메커니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4.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잠재력

지금까지 제1부와 제2부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정책, 그리고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책의 제3부에는 문학, 번역, 교육 분야의 논문 네 편이 또한 실려 있다. 오문석의 「운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이 대표적인 한국 시인 운동주의 시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적 주체성에 대해 탐구한 글이라면, 김주영의 「한국 다문화문학의 해석의 지평」은 손흥규와 하종오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오늘날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한국 문학자들의 인식을 점검한 글이다. 박미정·양명심의 「다문화

주의에 대한 문화번역 실천」은 펄벅의 『대지』와 유미리의 『8월의 저편8の果て』을 사례로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호미 바바)의 실천을 검토한 글이다. 그리고 박휴용의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격교육의 성격과 방향」은 미래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인격 교육의 이론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앞의 세 편이 문학, 문화 분야에서 다문화(주의)적 상상력이 갖는 긍정적 잠재력을 발굴하려는 시도라면, 박휴용의 글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형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려는 야심적인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매체학, 언어학, 문학, 번역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기본적인 의의는 현재 한국 다문화주의 관련 논의의 현황을 한 눈에 개괄하게 해주고, 또한 다문화주의 관련 학제적 연구 가능성을 가늠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몇몇 단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 책에서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이 어느 정도나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김리카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주의 정책이 비판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권 다문화주의 이론에 대한 전반적 논의도 한국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 양상)에 대한 포괄적 고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이 책은 한국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품위 있는 사회’ 건설을 한 대안들 역시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휴용이 제시한 교육학 모델을 제외하면, 그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물음은 여전히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구성원권’과 ‘주민권’은 언제쯤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적 시민권’은 과연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주민 가족’은 ‘다문화 가족’을 대신하고 ‘결혼 이주민’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적 토크’라는 소망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현재의 인종 차별적 게이트키퍼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책의 참된 의의는 바로 이와 같은 물음들을 제기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이 물음들은 연구자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 방식으로, 아니면 그 물음들의 근거를 되묻는 방식으로 다문화주의 관련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은 한국 다문화주의가 연구 대상으로서 매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의 논의 과정에서 이 책이 하나의 유의미한 계기로서 기능하리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